

민생 앞세운 與 vs 실정 파고드는 野… 국감 막바지 격돌

법사위, 공소청·검찰개혁 쟁점
서울·경기 현안 놓고 공방 예상
청와대 국감, 마지막 승부처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목표였던 '민생'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선 넘는 공세엔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실정을 드러내며 국감을 '야당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19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3주차엔 주요 부처의 장관을 다시 국회로 불러 주요 현안을 다시 점검하는 종합감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정돼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마무리한다.

주목되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공소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대한 첫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형사사법체계가 검찰청 폐지 이후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한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의 문제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18일엔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을 감사하고 26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정 거부'와 관련해서 법사위가 뜨거웠던 만큼, 종합감사 등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법관 재제정 논란을 두고 논리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재경경제위원회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사한다. 22일엔 재정경제부와 국세

청, 관세청, 23일엔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치른다.

정무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을 감사한 이후 22일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에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장본인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목하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2~23일에 국정감사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적절성과 반도체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서울시와 경기도를 감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경찰에 넘겼다고 책임까지 넘길 생각은 말라"며 "비위 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사의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유부터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국가직 소방 공무원에 대한

'재정 빨대'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국민의힘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지사를 향해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는 3주차를 지나 오는 30일에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로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한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벌써 충돌 중인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김 실장을 증인 채택하려고 했으나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을 국감 출석 권리가 없던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동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이른바 '인사 참사' 사태를 두고 청와대의 인사 라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조희대 탄핵 꺼낸 與… 野 “탄핵 국감” 반발

민주당, 탄핵 포함 모든 가능성 논의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국감(국정감사)'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까지로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데다, 실제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까지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또 국민의힘으로서도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여론전 외에는 저지할 방안이 없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미 탄핵의 티올(티)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열흘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그 수위도 올라갔다. 지난 7일 김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자진 사퇴의 안내선도 무한대

는 아니다'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들 전에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자진사퇴 촉구 외에도 탄핵소추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지난 16일 부산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표도 국감을 지나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봤다"면서 김 대표의 발언이 국감 전과 기조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감을 거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탄핵 추진 근거도 생겼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해명은 지난 12일 감사원 국감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라고 답하며 '거짓 해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탄핵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조희대

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효과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탄핵 추진으로 인한 지지층 결집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아직 존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이 탄핵을 정쟁으로 활용하며 장기전으로 끌고가,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고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대표는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면서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불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본인들이 초래한 민생 파탄과 외교·안보 위기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점식 “전작권, 시기 아닌 능력이 기준”

(국힘 원내대표)

“전작권 전환 일정 재검토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작권 현안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 그 자체로 안보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확고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에 대해서도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우는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불모로 잡아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민주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주당은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정부의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했다"며 "특히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우리 당이 일반 증인 채택을 요구한 39명 중 단 한 명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순수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추지사가 전 날고(故) 김민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한 데 대해서도 "남이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생각·반성하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재점화

국감 후 당헌당규 따른 후속조치
정청래 전 대표 측 “유출 경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에 신천지에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했다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해법을 찾는 방침인 가운데, 잠재된 갈등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

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TV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최고위가 관련 기구로부터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감 기간인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 종료 이후 의혹을 정확하게 검증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생각이다. 후속조치에는

당 차원의 조사를 넘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공개 보고 내용이 유출된 경위, 또 반·분·신 3자 비밀연합 주장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밝히고, 허위일 경우 책임 지라는 입장이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SNS에 "진상 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왜 신천지를 가지고 연판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